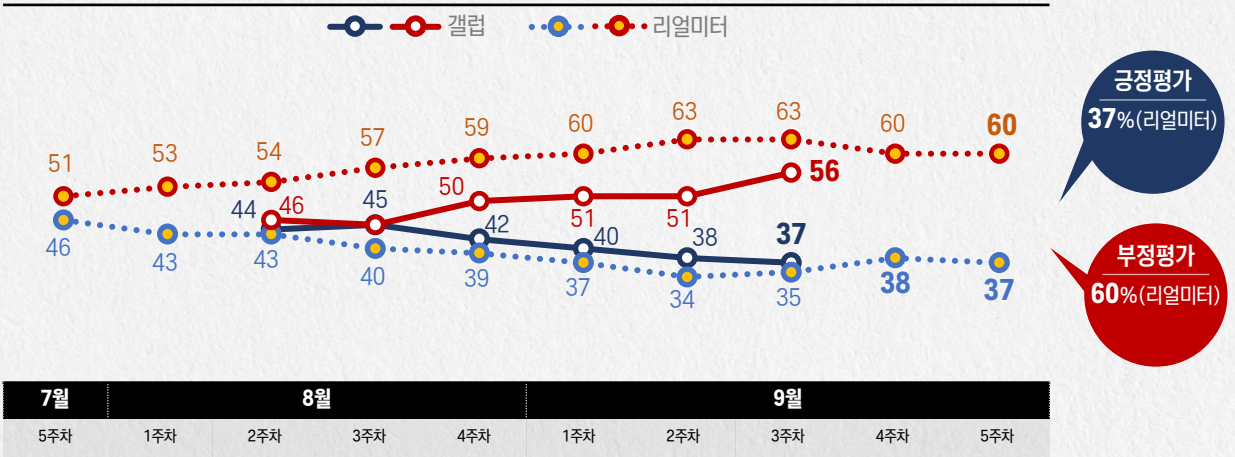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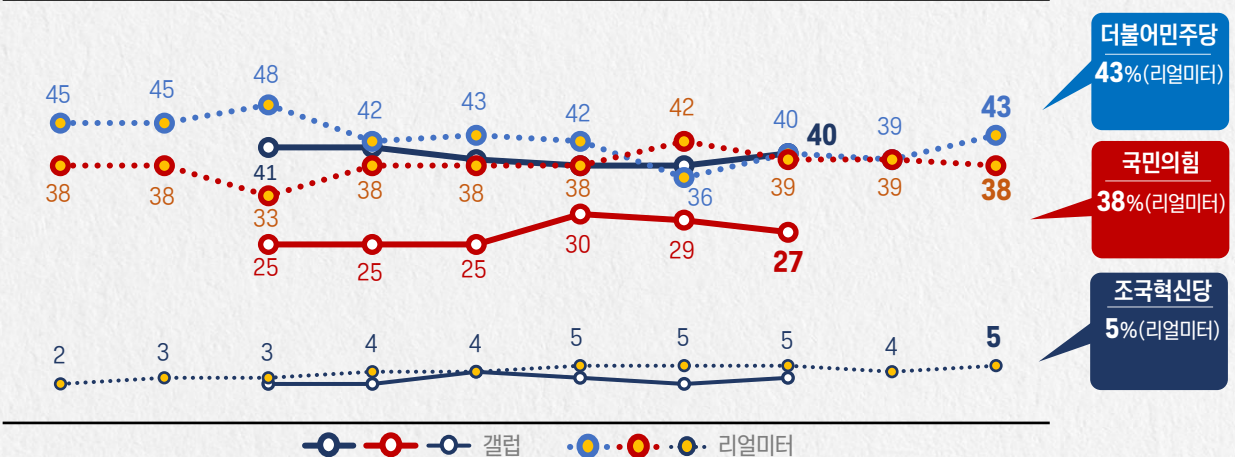


01 금주의 화두 :

- 거대한 퇴행이 축적되고 있다
- 영화 <암살자(들)> 논쟁과 기득권 연합의 분산형 재결집

02 주간 여론 동향 (2026년 7월 5주차 ~ 2026년 9월 5주차, 전화면접조사)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정당
지지도정치권
주요뉴스

- (09.28) 법사위, '조희대 국감 증인' 與 주도 채택 / 외교부,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관련 우크라이나 대사 초치... 허위공보 유감표명
- (09.29) 공소청 출범 전 첫 인사... 중대범죄부장 박진성·공공안전부장 최지석 / 강신철 "북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 (09.30) 김여정, 'DMZ 北지뢰' 전면부인 "서울의 자작광대극" / 트럼프, 韓 대미투자 발표... 알래스카 LNG 개발 포함
- (10.01) 청와대, 하준경 정책실장-문신학 경제수석 임명 /李大統領, "軍지휘권 타국 의존하는 나라 없다... 전작권 조속 환수"
- (10.02)李大統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요청한 재가... 임명 수순 / 공소청·중수청 오늘 출범

※ 9월 5주차 여론조사 결과 (세부)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사개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정당지지도			
		조사기간	사례수	응답률	긍정	부정	GAP (긍정-부정)	민주	국힘	혁신	(無)
CATI (가상번호)	NBS	09/28 ~ 30	1,000	18.8%	43	50	(-7%p)	35	25	3	(32)
	갤럽	-	-	-	-	-	-	-	-	-	-
	꽃	10/02 ~ 03	1,003	9.7%	47	52	(-5%p)	42	38	3	(13)
ARS (RDD)	리얼미터	10/01 ~ 02	1,009	3.0%	37	60	(-23%p)	43	38	5	(10)
	꽃	10/02 ~ 03	1,004	2.0%	39	61	(-22%p)	41	43	8	(3)

여론
동향

- [NBS]**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한다: 긍정 32% vs. 부정 61%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역할을 잘한다: 긍정 25% vs. 부정 68%
 공적주택 신규공급 대책 실현 전망: 이행될 것 26% vs. 이행되지 않을 것 64%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찬성 50% vs. 반대 41%
 임신중지 약물 건보 적용: 찬성 45% vs. 반대 49%
 대법관 제청 갈등 해결 방향: 대법원장 제청 후보자 임명 34% vs. 대통령과 협의 후 다른 후보자 제청 55%
- [꽃]** 범여권 대선주자 선호도: 김민석 10%, 조국 7%, 정청래 5%, 김부겸 5%, 송영길 4% 順
 범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한동훈 15%, 오세훈 12%, 장동혁 6%, 이진숙 6%, 유승민 5% 順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공감한다 49% vs. 공감하지 않는다 43%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대응: 강력한 대응 36% vs. 신중한 대응 58%
 AI개발 속도조절론: 개발 속도를 조절하도록 규제 강화 50% vs. 빠른 개발을 위해 규제 최소화 47%

03 정세 읽기

거대한 퇴행이 축적되고 있다

- 영화 <암살자(들)> 논쟁과 기득권 연합의 분산형 재결집

한국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보수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관심도 덩달아 높아져 영화는 오히려 흥행세를 타고 있다. 한동훈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재소환했다. 김태규는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을 부정했다. 이진숙은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공격했다. 지금 한국의 보수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일련의 흐름을 갖는 현상들로 보인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한편 외신을 통해서도 브라질 대선에서 좌파를 대표하는 현직 룰라 대통령이 우파의 보우소나루 후보에게 1차 투표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위에서 언급한 사건들은 각각 별개의 사안들이지만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공통적으로 부합한다.

첫째, 법원 판결과 국가적 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확정된 권위주의 범죄와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부정하거나 상대화하는 것이다.

둘째, 박정희·전두환·윤석열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통치의 계보를 재평가하고, 그에 저항했던 5·18과 노무현 등 민주주의의 상징을 공격하는 것이다.

셋째, 문화와 학술적 논쟁에 대한 비판을 넘어 상영 중단, 국회 소환, 형사고발 등 국가적·제도적 압박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언급된 일련의 사안들은 권위주의적 과거를 현재의 정치적 자원으로 다시 불러내고, 민주화 이후 형성된 역사적·헌정적 합의를 되돌리려는 ‘역사적 반동’의 정치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 반동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아니라 과거의 권위주의 언어를 현재의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분노에 결합해 새로운 대중정치로 재포장하는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 다른 소재, 하나의 흐름, 기억의 역전을 위해

[영화와 표현의 자유]

<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을 소재로 한 극영화로 제작진은 특정 인물을 사건 배후로 단정하지 않았고, 여러 기록을 토대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한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국힘은 영화가 박정희 정권의 배후 가능성을 암시한다며 역사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불매운동 제안과 상영 중단, 제작진의 국감 출석까지 요구했다. 형사고발 및 해외영화제 상영 철회 요구, 배우 집앞 시위 등 물리적 압박까지 하고 있다. 비판과 반론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상영 중단, 형사처벌, 창작자에 대한 국회 소환까지 요구하는 순간 논쟁의 성격은 ‘역사비평’에서 문화적 위축효과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공격이 된다.

03 정세 읽기

[노무현과 검찰 수사]

검찰청 폐지 직전 시점 한동훈은 노무현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을 조작수사의 피해자로 만들고 이를 통해 검찰을 악마화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20년간의 가스라이팅'으로 규정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노무현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도덕적·역사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윤석열의 내란죄]

9월 30일 김태규는 유튜브 인터뷰에서 전두환과 윤석열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연속된 서사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내란 아니다 → 윤석열도 아니다 → 민주당이 보수정부를 내란으로 몰았다 → 보수는 피해자며 복권이 필요하다.

[5.18 민주화운동]

8월 13일 이진숙이 국회에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5·18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고 전두환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5·18 단체와 정치권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본인도 5·18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사건은 과거에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주변부에 머물렀던 5·18 부정·편향 담론이 이제는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제도권의 '토론 가능한 의견'으로 진입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역사적 합의의 권위를 조금씩 침식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기억 뒤바꾸기]

위의 사건들은 각기 소재가 다름에도 정치적 작동방식은 유사하다. 기존의 역사적·법적 합의를 '한쪽 진영의 서사'로 규정하고 확정된 사실과 미확정 의혹을 같은 수준의 '논쟁거리'로 바꾼다. 권위주의 세력을 피해자 또는 명예회복 대상으로 전환하고 민주화 세력과 검찰개혁 세력을 역사조작의 주체로 공격한다. 반복된 발언을 통해 과거 주변적 주장을 주류 정치언어로 진입시키고 강한 발언을 통해 핵심 지지층과 온라인 여론을 결집한다. 그들은 기억 뒤바꾸기를 통해 과거 권력의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권력을 피해자로, 민주화의 성과를 특정 진영의 선전물로 바꾸려는 것으로 보인다.

● 지금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3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과 여권 내부 분열이 잠복해있던 보수세력에게 정치적 기회를 준 측면이 크다. 개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가시적이지 않고, 새로운 제도는 정착되지 않고 있다. 개혁 대상은 가진 힘과 네트워크로 생존을 도모하고, 개혁 지지층은 속도가 느리다고 실망하고 중도층은 개혁 피로와 민생 불안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시기이다. 저항은 강해지고 결집은 약화되면서 틈이 생기는 것이다. 지속되고 있는 민생의 불안도 이 틈을 넓힌다. 정권이 바뀌어도 내 삶이 나아지거나,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상실감과 박탈감이 커진다. 그들은 이 틈을 파고 든다. 지지율이 높을 때는 보수의 급진적 역사공세가 중도층의 반감을 일으킬 위험이 크지만, 지지율이 떨어지면 진보의 도덕적 권위가 약화되고 과거 권위주의 방어에도 장벽이 낮아지며 강한 반진보 메시지가 보수층 결집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03 정세 읽기

보수의 정체성 공백과 내부의 '경쟁적 급진화'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주요한 배경이 된다. 윤석열 내란과 탄핵은 보수정치에 심각한 정체성 문제를 남겼다. 윤석열과 단절하고 상식적 보수로 재편할 것인가? 윤석열을 희생양으로, 진보를 가해자로 만들어 지지층을 재결집할 것인가? 보수의 주류적 선택은 후자인 듯하다. 이 길을 선택하려면 윤석열 계엄부터 재해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두환 내란도 상대화하고, 5·18의 역사적 위상을 낮추며, 검찰개혁의 출발점인 노무현 수사까지 다시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윤석열 이후 보수의 서사를 다시 쓰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보수 내부의 세력구조는 복잡하다. 국힘 장동혁 지도부, 무소속 한동훈, 이진숙·김태규 등 당내 강경파, 보수 유튜브와 역사단체, 검찰 복원을 바라는 법조세력 등. 각자가 보수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더 강한 의제를 선점하면서 전체 정치공간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쟁적 급진화가 일어나는 양상이다.

이 흐름을 추동하는 세력은 누구일까? 정당, 법조계, 학계, 종교 및 시민단체, 보수 미디어와 유튜브 등에 다양하게 분포할 것이다. 이 세력은 사안별로 이해가 겹치는 느슨한 연합 정도의 성격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정당성 약화, 윤석열 정부와 검찰 재평가, 민주진영의 상징 약화와 개혁의 중단, 강경보수 중심의 야권 구조 형성 등의 공동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개혁세력 내부의 결집이 약화될수록 이들의 공간을 넓어지고 연합의 결속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 어떤 시사점을 얻을 것인가?

위에서 우리는 집권세력이 흔들리는 틈을 활용하여 퇴행이 축적되는 일련의 흐름을 살펴 보았다. 그 퇴행은 과거 권위주의에 대한 단순한 소환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형성된 역사적·현정적 합의를 흔들고, 권위주의적 보수의 정치적 정당성을 회복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 현재의 불안과 불만을 이용해 과거 권위주의를 미래의 대안으로 다시 포장하려는 정치적 운동이다.

최근 브라질 대선도 권위주의 지도자를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만으로 그 정치운동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운동을 낳은 사회적 불안, 조직적 기반, 역사적 서사에 동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권위주의는 다른 인물과 이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해진 답이지만 국정 지지율의 회복과 개혁세력 내부 결집력 강화가 이러한 퇴행과 반동에 대한 1차적 예방이자 처방이다. 아울러 윤석열 내란 관련 책임 규명과 처벌이 신속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법적 절차가 투명할수록 정치적 희생자 서사가 설 자리는 줄어든 것이다. 또한 검찰·사법개혁의 투명성과 디테일이 강화되어야 한다. 절차는 공개하고 권한과 책임이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진영적 논리보다는 기록 중심의 대응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비판을 허용하되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해법은 결국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살만하다, 희망이 있다'는 체감 신호야말로 정치적 반동의 여지를 줄이는 확실한 처방약이다. 개혁진영 내부의 다원성 회복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퇴행의 축적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공공정책·정치컨설팅 그룹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통령 PI를 수행한 전략컨설팅의 강자 / 가장 정확한 조사

지자체, 공공기관 정책홍보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여론조사, 선거컨설팅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9층(여의도동 13-25)